제주~칭다오 항로, 새 협정으로 돌파구 찾나

위성곤 지사 "손실보전금 줄이는 쪽으로 협상 중" 밝혀
새 협정 보전 규모 100억 미만시 정부 중투 심사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임 오영훈 도정이 체결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협정을 맺기 위해 중국 선사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협정에서는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여 재정 부담을 더는 동시에,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사) 절차 이행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3일 신문·방송사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문제를 묻는 질문에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계약을 새로 맺어 손실보전금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중국 선사와 새로운 협정을 맺으려고 해도 중앙투자심사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건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선사와 제주도가 운항손실금) 반반씩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2028년 10월까지 유효한 제주~칭다오 협정을 양측 합의로 중도 해지한 뒤, 새로운 협정에서 중국 선사도 화물선 운항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임 도정이 지난 2024년 말 체결한 제주~칭다오 협정의 주된 골자는 중국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 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런 협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됐지만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제주도는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했다. 항로 개설 이래 올해 4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48억여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은 장래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계약이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도 감사위 감사까지 받고 있다.

도는 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라도 정부에 중투심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같은 사후적 행정 절차 이행은 전례가 없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제주도가 새 협정 체결을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기존 계약의 재정 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어서 중투심사 대상이라도 이 계약을 완전히 소멸한 뒤 100억원 미만의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세 계약은 중투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가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여 중국 선사와 새 협정을 체결한다해도 이미 저지른 법령 위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재정 페널티는 피하지 못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투심사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 위법하게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 당한다.

도 관계자는 "새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교부세 감액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재정 손실 회복 노력이 있으면 페널티를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 협정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지선·보선 비용 보전액 40억6000만원

도선관위, 청구액 중 6억4000여만원 감액

지난 6·3 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들이 98%가 넘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46억9000여만원 중 6억4000여만원을 감액한 40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도지사선거 2명 등 총 61명이며 이중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 4명은 선거비용의 50%만 보전됐다.

도지사선거 후보 중 위성곤(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3억8900여만원을 청구해 이중 97.6%인 3억8051만원을 보전받았고, 문성유 후보(국민의힘)는 청구액 3억8700여만원 중 3억8435만원(99.1%)을 보전받았다. 교육감 후보 중 고의숙 당선인은 4억2413만원을 청구해 87.8%인 3억7246만원, 김광수 후보는 청구액 4억4390만원 중 4억3246만원(97.4%), 송문석 후보는 1억2292만원 중 5529만원(45.0%)을 지급받았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중 김성범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억7157만원을 청구해 94.7%인 1억6253만원을 보전받았고, 고기철 후보(국민의힘)는 1억9534만원 중 1억5896만원(81.4%)을 지급받았다.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은 청구한 후보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 김지은 후보(국민의힘)로 5123만원을 청구, 58.6%인 3002만원을 보전받았다. 보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제주시 연동갑 양영식 후보(더불어민주당)로 3827만원을 청구, 이중 95.2%인 3642만원을 지급받았다. 위영석기자

이재명 대통령, 미국·남미·독일 순방 마치고 귀국 미국·남미·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연교차에서

신뢰받는 행정, 냉정한 평가와 설득 필수

김 황 국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내걸고,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개원과 함께 도정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바쁜 한 달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민선 9기 도정의 주요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민선 9기의 핵심 전략사업과 100대 공약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타당성을 타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요 공약과제 중 지난 도정에서 추진해 온 핵심 사업 다수가 이름이 희미해지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포착됐다. 민선 8기 도정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미래 모빌리티인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그리고 우량기업의 유치와 도내 기업의 육성을 위한 상장기업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전환시 객관적 진단
도민사회 설득 과정 통해
신뢰 이어가는 행정 절실

물론 지난 도정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단순히 개별 사업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들 사업이 충분한 설명없이 민선 9기 공약 목록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마저 축소·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짚고자 하는 것이다.

언급된 사업들은 이미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거나 추진 중이던 과제들이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진방향을 바꿀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진단과 도민사회를 향한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평가없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절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은 불필요한 매몰비용이 되고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도지사의 정치적 철학을 반영해 사업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 또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행정과정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과의 단절이 정치적 차별화나 선언적 명분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수정·보완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과거를 무조건 지우거나 답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지나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돌아보며 신뢰를 이어가는 행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선 9기 도정이 이전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사업 조정의 이유를 도민 앞에 당당히 설명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향점을 보여주기를,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6-03호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감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감사 1명

2.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가.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나.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 공사를 대표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 참조

3.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 시작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모집직위	자격요건
비상임감사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경영·회계·세무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4. 직무수행요건

모집직위	자격요건
비상임감사	**1) 조직 내부관련 업무** –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 풍력단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기업유동성 조기 확보 – 풍력발전의 핵심역량 강화로 미래 신상장 위한 새로운 플랫폼 조성 – 관련 사업의 전문적 지식과 이해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 의지와 추진력 – 기업의 경제성(기업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해 나갈 수 있는 능력 –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해외 진출 기반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십 **2) 기타 수행능력요건: 개혁성 등 10개 능력(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5. 임용기간 및 보수
가. 임 기: 임용일로부터 3년 나. 보 수: 지급하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간: 2026. 7. 30.(목)~8. 14.(금) 18시까지 ※ 주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631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3층 제주에너지공사 인사담당자 앞
※ 우편 접수 시 제출 후 제주에너지공사 인사혁신팀 확인전화 필수: 064)720-7433

7. 필수제출서류
※ 접수 마감시간(`26년 8월 14일 18시)까지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필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서류평가 시 '필수제출서류 누락' 서류전형에서 탈락처리됨
가. 공 통 ※ 소정 양식 기재(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지원서 1부. ※사진부착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결격사유 확인서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발급기관 날인 필수(경력소지자에 한함)
나. 최종 임원후보자(최종 후보자 공고 후 개별 제출)
· 신원진술서 2부. ※ 소정양식 기재(서명 또는 날인 필수), 사진부착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지원직위에 대한 비전제시, 경영구상 및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7매 내외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원진술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jejuenergy.or.kr)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부가제출서류(지원서 상에 기재한 증빙자료)
가. 관련 자격증 각 1부. 나. 기타 학위증, 연구논문 등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각 1부.

9. 기타사항
· 이 공고문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